**외국인들의 "태권"** 19일 조선대 서석홀 대강당에서 열린 '2010 조선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에 참가한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들이 발차기 등 품새를 배우고 있다. 세계 16개국 태권도 수련생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요금 비해 시설 뛰어나…F1호텔 대만족"

### 드래그레이스 참가 탤런트 이세창씨 투숙 호평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동안 관람객들을 수용할 중저가 숙박시설인 일명 'F1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1대회 서포터스인 '포뮬러원을 사랑하는 모임'(포사모)이 F1대회 D-100일 행사의 하나로 지난 18일 목포에서 열린 드래그레이스 참가자들에게 F1호텔을 숙박지로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요금도 저렴하고 시설도 매우 좋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가한 탤런트이자 레이싱팀 넥센 알스타즈의 감독인 이세창씨는 행사 전날부터 1박 2일로 목포를 방문, 관광호텔이 아닌 F1호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관광호텔측에서 객실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F1호텔이 궁금해 숙박지로 선택했다"며 "F1호텔이 생각보다 넓고 아늑할 뿐 아니라 시설도 고급호텔 못지 않았다"고 만족해 했다.

F1호텔은 F1대회 기간중 부족한 관광호텔을 대체하기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중 객실수가 30실 이상이고 3~4성급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에 대해 F1대회조직위원회가 시·군과 합동으로 실사를 거쳐 지정한 숙박업소다. 현재까지 모텔 등 147곳이 F1호텔로 지정돼 있다.

F1조직위는 앞으로 F1호텔에 외국어가 가능한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조식 안내, 세탁 서비스, 미니바, 차량 렌탈, 각종 예약 대행 등의 관광호텔급 수준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시 공기업, 출연·출자기관 구조조정 어떻게 되가나

# 경영효율 10% 올리고 기능 겹친 곳 폐지

### 내달 5일까지 확정…대폭 감축 불가피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기업과 중복되는 기능을 이전하고, 기관별 중복되는 일부 기능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 28개 기관 담당자 회의를 열고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기업 조직혁신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30일 공기업 조직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공기업 조직 및 기능재편 방안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 방향은 ▲경영효율성 10% 이상 향상 ▲산하 공기업 등의 조직과 기능, 인력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또 광주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공공기능의 비중이 현저히 높을 경우 적자와 상관 없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업무 및 기능 면에서 민간기업의 영역으로 판단되면, 기관의 폐지 및 통폐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수가 기존 28곳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선자 시절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부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을 없애고, 일부는 통폐합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곳이고, 출연기관은 광주발전연구원, 남도학숙,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5.18 기념재단, 광주영어방송국,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 15곳이다.

또 출자기관은 광역정보센터와 한국CES, 수완에너지 등 3곳이고, 광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상무축구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문화연수원 등 6곳도 이번 조직재편 및 경영효율화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8곳에 대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의 수를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공공기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행자위 시 조직개편안 원안 가결

### 시민교통국 신설…정원 조례안은 증원수 1명 줄여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마케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직 개편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조직개편안과 함께 상정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정원 총수 증원 89명에서 증원 수를 88명으로 1명 줄이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8월2일자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자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민선 5기 강운태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으로, 기존 2실 6국 2본부 44과 3002명 체제를 3실 6국 1본부 45과 3091명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 개편안은 원안 의결됐지만, 정원 조례안은 광주시가 상정한 3091명을 3090명으로 일부 수정의결했다.

광주시가 이번에 상정한 정원조례의 정원 총수는 애초 3002명에서 집행부 12명, 소방공무원 76명, 의회사무기구 1명 등 총 89명을 증원한 3091명이었다.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보좌관을 비롯한 최소인원으로 조직을 운용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증원 인원 1명을 줄인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람 심기식'이 아닌 적재적소 인력운용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0일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2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위원회 전문가·공직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반시민 참여 대폭 확대

광주시가 위원회, 소위원회, 원탁회의 등에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과 교수·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참석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관련 업체의 과도한 참여, 이해관계 주민의 반발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19일 광주시는 "시민을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다음달께 광주시가 운영중인 98개 위원회의 시민참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여방식으로는 공모와 추천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선 5기 인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1377명 중 중복 참여가 196명(14.2%)에 이르러 다양한 의견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및 결정 만연, 형식화된 심의·의결 기능 등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전체의 12%(12개)에 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 지가 고민"며 "위원회 위원 선정과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민주당 "내년도 농어민 예산 사상 최대 삭감"

민주당은 19일 "내년도 농어민 예산이 사상 최대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악의 냉해 피해, 구제역 파동 그리고 쌀값 폭락 등으로 농어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진청·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6조 866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증가율인 6.9%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금년도 예산인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된 것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농어민 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대강 사업 예산과 농진청 이전사업비 예산을 제외하면, 금년 대비 1조4687억원(8.5%)이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오직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는 MB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